초광역 지방정부 이끌 초대 특별시장 선거 열기 '후끈'

전남광주특별시장 누가 뛰나

강기정

김영록

민형배

신정훈

이개호

이병훈

정준호

주철현

김화진

안태욱

이종욱

김선동

민주 후보군만 8명…텃밭 경선부터 '빅매치'
행정통합이 흔든 지선 판도…복합경쟁 구도
국민의힘·진보당 등 비민주, 후보자 저울질

광주와 전남이 하나가 되기까지 특별법의 국회 통과만 남은 가운데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특별시장' 선출이 지역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광주시와 전남도가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재편되면, 이번 지방선거는 기존 광주시장·전남도지사 선거와는 전혀 다른 구도로 치러질 수 있다.

초대 시장의 역할은 향후 전남광주특별시가 나아갈 방향성을 좌우하는 만큼 유권자의 선택이 어느 쪽으로 쏠릴지 관심이 모인다.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 자리를 놓고 현역 단체장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물론 민형배·신정훈·이개호·정준호·주철현 국회의원 등 후보군들이 속속 등판해 설 민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진보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도 후보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역 단체장인 강기정 시장은 민선 8기를 이끌며 광주시민의 염원인 복합쇼핑몰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전국화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도로 전면 개통, 광주 군공항 이전 합의, 국가 AX(AI 전환) 혁신거점 도시 예산 확보 등 주요 현안 성과를 전면에 내세우며 민심을 살피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강진·완도군수, 전남도 행정부지사, 18·19대 국회의원을 거쳐 민선 7·8기 도정을 이끌었으며, 행정과 정치 경험을 동시에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오픈AI·SK 협력 데이터센터 추진, 국가 AI컴퓨팅센터 공모 선정,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유치, 전남 전 지역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고흥 누리호 성공 발사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서 도정 성과가 선거 국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에는 광주에서 타운홀미팅을 수차례 진행, 광주권 유권자의 표심을 잡는데 집중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민 의원은 민선 5·6기 광산구청장과 노무현·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다. 중앙과 지방을 두루 경험한 폭넓은 행정 경험이 강점이다.

지난 총선에서는 전남도지사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후보를 꺾으며 전국적 인지도를 쌓았다.

최근에는 통합특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와 함께 전남권 민심 공략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본보와 KBC 광주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2~3일 광주·전남 만 18세 이상 시·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 19.0%로, 김영록 지사(18.6%)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기도 했다.

신정훈 의원도 출마 채비에 들어갔다. 나주시장을 지낸 3선 국회의원인 그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심사를 앞두고 광주·전남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특히 행정·재정권 배분과 지역 균형발전 방안 등 민감한 쟁점들을 직접 정면으로 다루며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심도 있는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4선 중진인 이개호 의원은 최근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다시 호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는 '남부권 시대'를 열겠다는 구호로 중점 과제와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특별법의 주요 특례 조항에 대해 정부 부처가 불수용 입장을 밝힌 데에 대해 쓴소리를 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도당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전면전에 나설 채비 마쳤다. 검사장 출신 법조인으로 여수시장을 지냈고, 원내부대표·최고위원을 거쳐 도당위원장으로 당무를 총괄해 왔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전남이 만든 정치적 자산을 실질 지원으로 환원받아야 한다", "22개 시군 구석구석을 돌며 전남의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며 권역 균형 프레임을 정면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의 '호남 메신저'로 통하는 이병훈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도 출마를 공식화하고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그는 정통 행정 관료 출신으로, 동구에서 박주선 의원과 세 번의 맞대결 끝에 국회에 입성했다.

5대 권역 중심의 발전전략을 제시하며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그는 호남특위를 지렛대 삼아 지역 현안 챙기기는 물론 토론회를 통해 민심을 청취하는 등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정준호 의원도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히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호남지역 유일 청년 후보로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광주 도시철도 2호선,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과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했다. 특히 '광주전남 5극3특 행정통합법'을 대표 발의하고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지원, 최근에는 출마를 공식화하며 기업·대학 유치 등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합특별시장 선거에서 최대 관심사는 특별법 통과 후 이르면 4월 초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결과다. 광주·전남 지역 특성상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가 곧 본선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초대 특별시장 입후보 예정자로 현재 8명이 뛰어들 것으로 보이면서 후보간 '합종연횡'도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선거구 확대로 후보자 수도 크게 늘어 결국 전략적 연대와 소위 '빅 텐트'가 희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도 선거구 역이 확대된 점에 주목, 통합 경선을 치를지, 전략공천으로 단일후보를 내세울지 내부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맞춤형 공약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광주시장 후보로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전남도지사 후보로 김선동 전 국회의원을 내세웠던 진보당은 조만간 통합단체장 후보를 낙점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또한 통합단체장 선거 구도가 구체화되기 전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시·도당에서 안태욱 광주시당 위원장,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 등 시·도지사 후보로 물망에 오른 이들을 중심으로 후보를 세울 것으로 알려진다. 조국혁신당은 명확하게 후보군을 내놓지 않았지만 지난해 말 조국 대표가 광주를 찾아 "후보로 염두에 둔 인물이 있다"고 언급한 만큼 초대 특별시장 선거에 후보를 낼 가능성도 있다.

"선두권 후보가 중·하위권 1~2명과 손을 잡거나 중위권 후보 간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대세를 장악할 수 있다", "행정도, 정치도 '통합 시너지'를 노린 체급 높이기가 치열할 것"이라는 게 지역 정가 관측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김대중·이정선' 현직 주도 속 후보군 재편 움직임

전남광주통합교육감 누가 뛰나

이정선

김대중

강숙영

고두갑

김해룡

장관호

정성홍

최대욱

교육통합에 선거 격변…교육수장 인물 경쟁 본격화
현직 재선 구도 맞서 광주 정성홍 단일후보로 선출
조직력·인지도·선거비 등 부담…새 경쟁구도 형성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차기 교육감 선거 판세도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광주와 전남 전체를 아우르는 단일 교육수장을 선출하는 초광역 선거가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직 교육감과 출마 예정자들 모두 전략 재정비에 들어간 모습이다.

지역 교육계는 행정통합 추진이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을 넘어 교육행정 체계와 선거 구도까지 흔들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선거 권역 확대에 따른 조직력, 인지도, 선거비용 부담 등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기존과는 다른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흐름은 현직 교육감들이 통합 이슈 대응을 주도하며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양상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특별법 발의 이후 광주와 전남을 오가는 공개 일정을 확대하며 통합 선거 대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21일 오후 2시 전남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두 번째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특히 '실력 광주' 위상 회복과 학교 현장 중심 정책을 강조하면서,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 분야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도 공청회와 정책토론회, 지역 순회 일정 등을 이어가며 통합교육 담론 형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글로컬 미래교육과 인재 양성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현직 재선 구도에 맞서는 도전자 진영에서는 단일화와 개별 경쟁 전략이 동시에 진행되는 양상이다.

광주에서는 시민사회·노동단체 중심 단일화 경선을 통해 정성홍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장이 11일 도전자 진영의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정 전 지부장은 교원단체 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교육현장 중심 정책과 교육자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지 기반 확장에 나서고 있다. 노동·시민사회 진영과의 연계성도 강점으로 평가된다.

다만 정 후보와 함께 단일화 경선에 참여했던 김용태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과 오경미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과의 직함 문제 갈등이 끝까지 이어지면서 단일화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날지 주목된다.

이른바 '밴드웨건 효과(Bandwagon effect)'가 제한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경선 탈락 후보들의 지지층이 정 후보로 완전히 결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전교조 후보들 간 단일화'라는 점이 외연 확장 측면에서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전남에서는 김해룡 전 전남 여수교육장과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을 중심으로 단일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인사는 이들 두 명 뿐이다.

김해룡 전 교육장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 행정을 두루 경험한 실무형 교육행정가로 평가된다. 지역 교육 격차 해소와 기초학력 강화 정책을 중심으로 안정적 교육 운영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장관호 전 지부장은 교원단체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민주성 강화와 교육 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자치 확대와 현장 중심 정책 설계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행정통합 변수는 출마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해룡·장관호 후보와 단일화 논의를 이어가던 문승태 전 순천대 부총장은 최근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며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지지를 공식화했다. 문 전 부총장은 대학 행정 경험과 인재 양성 정책을 강점으로 내세워 왔으며, 전남 인재 육성 정책을 주요 공약 방향으로 제시해 왔다. 다만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존 지역 단위 정책만으로는 선거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부총장 지지세가 김 교육감에게 어느 정도 흡수될지도 관심사다.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는 출마 예정자들도 지지층 확보에 분주한 모습이다.

강숙영 전 전남도교육청 장학관은 지역아동센터와 학부모 모임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장학사·연구사·장학관 등 교육전문직 10년 경력과 함께 창평중 교감, 여수충무고·순천복성고·문향고 교장, 전남교육청 자연탐구원장 등을 역임하며 20년 넘게 교육 현장과 행정을 경험했다.

고두갑 국립목포대 경제학과 교수도 12일 광주전남 통합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세 결집에 나서고 있다. 광주전남 통합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입지자는 고 교수가 처음이다. 핵심 비전으로는 △기초 문해력 강화 △교육 기본소득 기반 교육복지 확대 △AI 시대 자립형 인재 양성 △학교 거점 복합공간화 △전 생애 교육 체계 구축 등 '5대 교육 대전환'을 제시했다. 주요 이력은 기획재정부 전남지역 경제교육센터장, (사)기본사회 전남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다.

최대욱 전 한국교총 부회장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는 전남대 사범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했으며 고려대 교육대학원 총학생회장, 광복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통합 선거가 확정될 경우 후보군 재편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선거 권역이 광주와 전남 전체로 확대되면 선거 비용과 조직 구축 부담이 커지면서 자연스러운 후보 정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광주·전남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책정한 선거비용 제한액은 광주 약 7억2400만원, 전남 약 15억800만원으로, 단순 합산만 해도 22억원을 넘는다.

이와 관련 군소 후보 진영에서 광주·전남 광역 단일화 움직임도 감지된다.

광주공천위는 현재 후보 단일화 경선 일정이 중단된 전남공천위와 협의를 거쳐 양 지역 통합 단일화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공천위가 추진하는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 일정을 중단하고 광주공천위에 통합 단일 후보 협의를 요청했지만 아직 뚜렷한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교육 현장과 학부모 사회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타난다. 광주에서는 교육 정책 안정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전남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대응과 교육 자원 효율화 측면에서 통합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함께 나온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교육감 선거가 단순한 인물 경쟁을 넘어 통합 이후 교육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성격이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낼수록 교육감 선거 역시 기존 지역 선거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수 중심 선거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